

EU, 인도네시아산 팜유 덤핑조사

정부보조금 수혜 의혹으로 ...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원가 탓 주장

인도네시아 팜유·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이 유럽연합(EU)의 바이오디젤에 대한 덤핑조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바이오디젤생산자협회(Aprobi)가 EU 집행위원회의 덤핑조사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과 가격결정 방식 등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11월13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월10일 관보에서 예비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들이 정부 보조금 등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덤핑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EU의 덤핑조사는 EU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 75사를 대표하는 유럽 바이오디젤위원회가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수입 급증으로 일부기업이 도산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8월 조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은 EU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유럽산보다 톤당 60-110달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13개월 동안 덤핑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9개월 안에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폴루스 차크라완 Aprobi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은 덤핑 때문이 아니라 원료인 팜유 가격이 유럽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채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의 수출 가격은 정부가 매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EU에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의 팜유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국제수요가 증가하면서 팜유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 바이오디젤 수출량은 54만4700톤으로 2011년에 비해 188% 폭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3>